신당-민주 통합 후폭풍 봉합 국면

"판 깨면 대선 필패" 위기감 작용

鄭 "정치생명 걸겠다"… 반발 잠재워
민주당도 강경 입장 다소 누그러져

전격적인 통합 선언 이후 극심한 후폭풍에 직면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원샷 통합'이 수습 국면을 맞고 있다.

정동영 후보의 절절한 호소와 대선 후보를 상처 낼 수 없다는 대통합신당 내부 여론, 민주당의 유연한 태도가 맞물리면서 거세게 몰아쳤던 통합의 후폭풍이 잠잠해진 것이다.

통합 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은 물론 합당선언 무효화 요구로까지 이어지면서 심상치 않았던 대통합신당 내부의 반발 기류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상임고문단-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수그러들었다.

대통합신당을 구성하는 각 계파의 수장과 원로 30여 명이 총집결한 이날 회의에서는 4자 회동의 뜻을 존중하고 협상단을 구성한다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4자 회동'에서 합의된 통합 선언에 따라 조속히 후속 실무협상을 진행하자는 정동영 후보 측과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당내 반발세력의 상반된 입장을 적절히 절충한 셈이다. 즉, 민주당과의 통합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진 셈이며 통합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당내 반발세력의 요구는 일단 무력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정동영 후보가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배수진의 각오를 드러내며 호소에 나선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선 후보에 대해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당내 여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날까지만 해도 '재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던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총선 공천 지분과는 무관하다"는 뜻을 신당 내부로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민주당과의 통합과 관련한 민주신당 내부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협상과정에서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협상단 구성'을 둘러싸고 정 후보 측과 신당 지도부의 해석이 다르다. 정 후보 측은 '4자 회동 합의에 따른 후속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친노 그룹을 주축으로 하는 당내 강경파는 '통합 조건을 다시 논의하는 협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신당 내부의 수습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결과에 대한 '재론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조속한 후속협상을 통해 합당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당 측이 4인 회동 합의문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민주당은 일절 협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민주당은 후속협상에 들어가 18일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 신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양당 대표와 협상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후속협상에 착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이 당내 분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열린 대통합신당 최고위원 및 상임고문단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서남권특별법 제정 약속 지켜라"

서남권 주민 200여명 상경 한나라 당사 시위
전남도의회 국회 방문 F1 특별법 교섭 활동

서남해안포럼 회원등 전남 서남부권 주민 200여명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서남권특별법 제정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서남해안포럼 회원 등 목포·신안·무안 등 전남 서남권 주민 20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서남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이날 시위에서 "서남권특별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내세우는 호남발전 공약은 오로지 대선 득표를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이 후보는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서남권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정쟁을 이유로 민생법안인 서남권특별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곳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서남권 주민을 우롱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이명박 후보는 서남권 발전 약속을 이행하라" "말로는 호남 배려, 행동은 호남 무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전도 벌였다.

이와 관련 서남해안포럼 최태욱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서남권 특별법 제정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는 21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서남권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간사인 윤두환 의원과 상의했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전남도의회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위원회'도 FI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교섭활동에 나섰다.

강우석(신당·영암2) F1특위위원장과 장 일(민주·진도1) 의원 등은 14일 오후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대회의 안정적인 개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3일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F1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의회 F1특위가 국회에 직접 찾아가 교섭활동을 벌인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숨가쁘게 달려온 여수엑스포 유치활동 3년

국가계획 확정후 전국민적 열망
민·관·기업 한마음으로 뛰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은 정부부처와 전남도·여수시 등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물론 전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국가계획 확정 이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본격 시작된 2012 여수엑스포 유치전은 광주·전남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2 여수엑스포는 지난 2002년 '2010 세계박람회' 개최권을 중국 상하이에 아깝게 내준 후 같은 해 12월 전남도와 여수시가 정부에 개최를 건의하면서부터 태동됐다. 2년여의 계획 추진 끝에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정부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남도 및 여수시도 각각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개최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어 2006년 5월 우리나라는 세계박람회기구(BIE)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같은해 11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신청국이 한국(여수)·모로코(탕헤르)·폴란드(브로츠와프) 등으로 확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1월 전남도 신청사 개청 메시지를 통해 정부 차원의 확고한 유치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올 4월 현지실사 때 여수에 직접 내려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을 주제로 한 여수엑스포 유치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해 BIE 실사단을 감동시켰다.

민간기업들도 팔을 걷어 부쳤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명예유치위원장을 맡아 BIE회원국을 순방하며 여수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삼성과 LG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들은 물론 해외진출기업은 자발적으로 여수엑스포 전령사가 됐다.

전남도 역시 2012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대외유치교섭활동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준영 지사는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및 아시아 등 21개국을 방문하고 여수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이를 위해, 지구를 4번 순회한 거리와 맞먹는 13만㎞이상을 이동했고, 총리급 이상의 인사를 만난 것도 8회에 이르며, BIE회원국 장·차관급 인사는 약 170명, 대사급 인사 160여 명을 접촉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왔다.

도는 또, 여수박람회 유치에 필수적인 SOC의 확충을 위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국도 17호선 등 12건의 SOC사업에 오는 2011년까지 10조원 가량을 투자키로 하고 올해까지 2조 2천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2012 엑스포 개최 후보도시인 여수시와 시민들의 열기도 남달랐다. 여수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질서·청결·친절·봉사'를 내세운 '4대 시민운동'을 바탕으로 하루도 쉬지않고 엑스포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한국·모로코, BIE 회원국 유치 경쟁

"우호적인 나라를 하나라도 더 회원국에 가입시켜라."

2012 세계박람회 개최국 결정일이 15일로 12일 남은 가운데 우리나라와 모로코가 자국 지지성향이 높은 국가를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에 가입시키기 위해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12 세계박람회 유치신청 3국 가운데 2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와 모로코는 서로의 우방을 세계박람회 개최국을 결정 투표에 참가하는 BIE 회원국에 경쟁적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 국가의 '회원국 유치' 정보 탐색전도 치열하다.

14일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나라로 분류되는 사모아와 솔로몬제도, 피지제도 등 오세아니아주 3개 국가가 BIE 회원국에 정식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은 모두 114개국이 됐다. BIE 회원국 가입은 개최국 결정일인 27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가능하며 BIE 회원국 추가 가입국들이 2차 투표 때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